

녹색당 조기대선 대응 어떻게 하고 있나?

‘사회공공성에 기초한 생태 평등사회’

2025. 3. 31.

서울녹색당 김유리 운영위원장

진행 순서

01

정세 인식

02

기후 · 생태위기와
사회경제적 불평등 위기

03

녹색당
사회대개혁 과제

04

녹색당
조기대선 대응안

본 자료는 임시전국위원회(25. 3. 9.)에서 일부 보완하기로 하고 승인한 <사회대개혁 과제>와
전국녹색당 대의원대회(25. 3. 22.)에 제출한 <조기대선 대응안>을 바탕으로 함

01.

정세인식

차별과 혐오를 넘어, 평등으로!

기후를 지키고 삶을 돌보는 생태평화의 녹색 민주주의로!



12.3 친위 쿠데타 이후 광장시민 요구는 실현될 수 있을까?

- 국민의힘은 혐오와 차별을 이용하는 극우 세력 영향력 아래로
- 민주당은 친자본 경제성장론으로
- 사회비전이 부재한 조기대선 국면에서의 ‘도로민주당’

녹색당은 탄핵 이후 사회비전으로 ‘생태적 평등사회’를, 개헌안으로는 ‘생태헌법’을 제시

02.

기후·생태위기와 사회경제적 불평등 위기

차별과 혐오를 넘어, 평등으로!

기후를 지키고 삶을 돌보는 생태평화의 녹색 민주주의로!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자본주의 성장체제 정치신념 공유

- 200년간 화석연료 의존하다 2050 탄소제로 체제로의 전환은 인류의 도전
- 기후 피해가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문제에 주목
- 정의로운 전환: 일자리 소득 보장, 삶의 기본 필요 공적 보장 필요

**녹색당은 ‘자본주의 성장체제’는
기후 · 생태위기와 사회경제 불평등 위기의 동일한 기원이라고 진단**



사회경제 차별과 불평등

- (1) 대한민국 신자유주의 정치경제 체제 1997년 외환위기 계기로 급속 형성
(시장 자율, 정부 축소, 규제완화,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화, 비정규직 증가, 공공부문 축소, 긴축 등)
- (2)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
(대한민국 상위 10%와 하위 50% 자산격차 52배)
- (3) 비정규직
(2024년 8월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 수 845만 명, 임금노동자의 38% 차지)
- (4) 불안정노동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 제공하여 수당을 받는 비임금노동자 2022년 기준 연평균 1천 114만원)
- (5) 청년실업
(2024년 기준, 전체 실업자 중 청년층 비율 무려 37%)



사회경제 차별과 불평등

(6) 몰락하는 자영업자

(2023년 기준,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922만 명, 전체 개인사업자의 75.7%)

(7) 가계부채 증가

(이명박 전세대출 도입, 박근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문재인 부동산 버블 방치)

(8) 투기수단이 된 주택 정책

(2023년 기준 주택보급률은 102%이지만 2,207만 가구 중 무주택 가구는 43.6%)

(9) 노인빈곤

(대한민국 노인빈곤율은 2020년 기준 40.4%, OECD 국가 중 1위)

(10) 높은 자살률과 고독사

(청년(20세~34세)과 80세 이상 노인 자살률 OECD 국가 중 1위)

03.

녹색당 사회대개혁 과제

차별과 혐오를 넘어, 평등으로!

기후를 지키고 삶을 돌보는 생태평화의 녹색 민주주의로!



경제성장은 불평등을 심화했다/경제성장은 기후와 생태위기를 야기했다.

- 경제 투입 에너지 40%, 물질 사용량 20% 축소해야 파리협정 달성
- 시민의 결집으로 에너지 사용량 줄이는 게 아니라 이미 충분한 부!
- 사회 공공 정책으로 한정 자원을 평등하고 합리적으로 배분!

녹색당이 제안하는 사회대개혁의 방향은
‘사회공공성에 기초한 생태 평등 사회’



기후와 생태 보호, 기후정의 조치

- (1) <탄소중립녹색성장법>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로 전면 개정
(IPCC 권고에 따라 2018년 대비 60% 이상 감축-현재 2031~2050 감축목표 부재)
- (2) 석탄발전소 폐쇄 이후 정의로운 전환과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2025년부터 폐쇄를 시작하는 석탄발전소, 일자리 전환,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필요)
- (3) 핵발전 진흥 중단과 조속한 탈핵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백지화하여 핵발전 진흥 중단해야)
- (4) 생태학살 중지
(신공항 백지화, 4대강 자연성 회복, 기후대응 댐 건설 중단,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 (5) 기후 · 생태위기 대응 헌법 개정
(국가의 기후생태보호 의무,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 환경공익 소송 도입)



기후위기 시대 민생보호 조치

- (1) 공공정책으로 사회적 기본 서비스 제공
(에너지 민영화 저지와 에너지 기본권 보장, 친기후 녹색공공임대주택 확대, 교통량 감축과 교통기본권 보장하는 공공교통 확대,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과 기업의 민주적 통제)
- (2) 부의 재분배
(부유세, 누진재산세/소득세 및 법인세 강화, 금융투자소득세로 녹색경제로 전환)
- (3) 농업과 농촌
(농지 공유제 기반 생태농업 전환과 먹거리 기본권 보장)
- (4) 산업과 노동
(노동시간 단축, 노조법 2,3조 개정 및 비정규직 차별 시정, 산업안전 제도 강화)
- (5) 기후위기 피해 사전 사후 보호
(기후위기 피해 입는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 농어민 피해 책임)
- (6) 지역소멸 시대에 자치분권 강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으로 지역 살리기
(지역공공은행 설립 등)



**사회적 차별
철폐
시급 조치**

(1) 차별금지법 제정

(헌법이 규정한 인간 존엄과 평등 이념을 실현하는 최소한의 장치)

(2) 성소수자 동성결혼 보장 및 모두의 가족구성권 보장

(동성혼 허용하지 않는 민법에 헌법 소원 제기)



정치개혁 과제

(1) 선거제도 개혁

(비례성 강화하는 완전비례대표제, 위성정당방지법, 선거연합 제도 개혁, 결선투표제, 정당 설립 요건 폐지)

(2) 대통령제 개편 및 권력 분산 입법

(거부권(재의요구권) 제한,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기관 구성권, 국무위원 임명권 제한 및 분산)

04.

녹색당 조기대선 대응안

차별과 혐오를 넘어, 평등으로!

기후를 지키고 삶을 돌보는 생태평화의 녹색 민주주의로!





2025년 목표

2. 시국 투쟁과 조기대선 국면에서 녹색정치 확산을 위한 ‘사회공공성에 기초한 생태 평등 사회’의 비전과 과제를 정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진보3당 정치연합 및 사회운동과의 일상적 연대연합을 강화한다.



활동 보고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사회대개혁특별위원회 기후·생태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 소위원회에 참여 (이치선 정책위원장 직무대행)하여 사회대개혁 과제를 작성함.

진보3당과 기후·노동·사회운동 단위의 시국간담회를 계기로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를 꾸려 시국 공동대응

현재 녹색당은 노동당, 정의당 및 체제전환 연석회의(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전국결집, 평등의길 등)등과 대선 공동대응을 논의하고 있으며, 기후·사회운동 단위와의 공동대응 논의 테이블을 확대해 나갈 예정.

대선 방침

2025 녹색당 대선대응 : 풀뿌리 지역정치와 녹색·진보정치의 토대를 조직하는 대선 실천에 나선다

- 녹색당은 조기대선 국면에서 풀뿌리 지역정치를 강화하고 지방선거 등 대선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힘을 모은다. 이를 위해 풀뿌리 공론장 사업 및 당의 조직·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기획을 논의·추진한다.
- 보수양당정치 극복과 녹색·진보정치 세력화를 위해 진보3당 공조 및 녹색·진보정치세력의 연대연합을 강화하고, ‘가)조기대선연대회의’에서 선출된 후보를 전국위원회 승인을 통해 ‘녹색당 지지후보’로 지원한다.
- 대선기간 사회운동 세력과의 연대를 이어가며 향후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토대를 만든다.

그간 당무협의회 및 전국위에서 ‘가)조기대선연대회의’의 대선공동대응 기획안에 관해 논의한 결과, 조기대선 국면의 촉박한 일정 내 대선 공동대응에 필요한 당원 의견을 수렴하며 당내 절차를 추진하고, 대선공동기구의 재정·인력 책임을 지는 것이 무리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공동대응기구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하되, 진보3당 및 노동·사회운동세력과의 공조를 유지하며 ‘가)조기대선연대회의’에서 선출된 진보독자후보를 녹색당 지지후보로 지원한다.

위 내용은 임시전국위원회(25. 3. 30.)에서 의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함